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8호

발행일: 2023. 7. 27. (목)

제408회 국회(임시회, 2023. 7. 10. ~ 2023. 7. 28.)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 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 1. 개관

제408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7월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51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08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영아살해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등에 편입된 경우 해당 복무기간을 무효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8회 국회의 2023년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51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4	정무위원회(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의원 등 12인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의원 등 12인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의원 등 12인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의원 등 12인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11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3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1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등 12인
15	외교통일위원회(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16	국방위원회(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등 12인
18	행정안전위원회(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의원 등 10인
20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4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2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2인
2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 의원 등 10인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 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30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3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3	문화체육관광위원회(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3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35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36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 의원 등 11인
3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 등 15인
38	보건복지위원회(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등 10인
4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 등 10인
4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4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등 16인
4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48	환경노동위원회(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4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 등 10인
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책 이슈

### 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 개요

2000년대 이후 국내 유통분야 산업구조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도하는 이른바 ‘기업형 유통’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모바일 쇼핑 역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유통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과거에 제조업체에 쏠렸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였고, 소매업체가 유통거래를 주도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소비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소수의 사업자가 다양한 유통채널을 독점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에 일방적 · 편파적인 거래조건(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부당 감액,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가 관행화되었고, 이에 따라 특히 대항력이 약한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중 ·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0호에서 다룬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본회의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 · 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b>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b>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 · 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023-07-18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 과제목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 확보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마련 및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 주요 내용

##### (플랫폼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입점업체, 소비자의 불공정피해 방지

-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 · 거짓후기 등) 시정

##### (납품단가 제값 받기) 제때 제값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강화

-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 · 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 단가 조정 관행 확산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 조정협의 불응 등 위법행위는 엄정 시정하고(실태조사, 신고센터 운영), 중기조합의 대협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 중 ·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 마련

-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One-Stop 지원
-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확대

##### (소비자 안전환경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품 안전인증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범정부 안전 종합정책 수립을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 2022년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공정거래위원회, 2022. 8. 16.)

#### ④ [소상공인 · 납품업체]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시정

- 가맹본부, 대형 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중점 감시
-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 금지

\* 예: 납품업체에게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년 정부 업무보고(공정거래위원회, 2023. 1. 26.)

#### □ 중소 납품업체·대리점주의 고충 해소

- **(유통)**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대규모유통법 개정)
- **(대리점)**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23.3.)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안: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2023. 2.

[유의동 의원안: 협의회 상임위원 신설 및 위원장 겸임 등](#) 2023. 2.

[대규모유통업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분쟁조정협의회 및 분쟁조정 절차](#)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판 공정거래백서](#)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3. 5. 2.

- 경쟁 관점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됨
  - 온라인 플랫폼 규제들 마련을 두고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갑을관계 문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고려와 시정 요구가 부각됨으로써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경쟁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법·정책 마련의 기본 방향과 그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됨
- 새로운 규제들 마련을 위한 입법적 접근 방향 설정이 중요함
  - 새로운 규제들 마련을 위한 입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① ‘Online Platform’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Big’에 대한 경쟁 관점의 우려, ② 개별 거래관계와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의 동시적 접근, ③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체계의 유효한 작동여부 확인과 개선 방향, ④ 실제법 및 절차법적 차원의 병행적 대응 필요 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유기적 입법 방식의 고려가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남용규제’ 부분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반영하고 심사지침 등 예규 등을 통해 그에 관한 해석 적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이때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제9차 내지 제10차 개정 과정에서 보여진 ‘남용감독 규정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유기적인 입법 추진’ 방식은 물론 실제·절차법적 주요 내용의 참고는 유의미할 것임
  - 거래상 지위에 따른 ‘갑을관계’ 문제에 대하여는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또는 공정거래법 제45조 등 기존 법령 적용을 전제로 관련 심사지침 등의 제정을 통해 이를 탄력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EU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강화](#)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2020. 1. 8.

- 온라인 플랫폼 규칙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온라인 검색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활동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소 판매업체들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역시 크게 증가해 왔고,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할 우려가 커짐
  -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이사회 규칙」을 제정하여 2020. 7. 12.부터 시행할 예정임

□ 주요 내용

- 동 규칙은 거래조건을 공정화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중소판매업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 등 3개의 주요 과제를 담고 있음
-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으로는 판매업체의 상품 공급 제한·유보·중단 및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이용자의 계약해지권 명시 등이 포함됨
-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게 대한 차별적 대우나 최고우대고객조항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이 있음
-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조정절차의 지원, 단체소송제의 도입 등이 있음

□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

- 동 규칙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온라인 유통 업체, 그리고 소비자 및 판매업체를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검색엔진까지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입법례가 될 수 있음

[공정거래 분쟁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정책연구소 2021-제5호 2021. 12.

- 기존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파악
  - 공정거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여 관련 조직, 내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
  -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자료의 통계적 분석, 조사관들에 대한 인터뷰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현황 진단
- 조정원 실무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법리적 개선방안으로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조정원 내부규칙 간 간극이 있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의 개선안 제시
  -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립된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 설치 및 소회의 운영에 관한 개선안 제시
  - 실무적 개선방안으로서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조정교육 강화, 조정 성과에 대한 인식 확대, 민원대응 방안 마련, 조정원칙 공유 등 실무자 니즈(needs)를 반영한 개선안 제시

## 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 개요

정부는 미래 주역으로서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구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관리, 보호종료아동의 복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최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등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5호에서 다룬 육아지원 강화 이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p><b>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며, 또한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모의 사망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p>	2023-07-18 (원안가결)
2	보건복지위원회	<p><b>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립지원 체계는 18세에 달한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제2의2·제2의3 및 제4의2 신설, 안 제28조의2제3항제5호). 또한,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관련 위탁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p>	2023-07-18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 과제목표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학대 예방으로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

#### 주요 내용

(부모급여 신설)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 '23년 70만 원, '24년 100만 원으로 단계적 확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아동당 교사비율과 시설 면적 상향 검토,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 부모교육·시간제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방안 마련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 보충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미와 민간육아도우미 대상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산모·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임신·출산 모바일앱' 고도화 및 난임부부 시술비·정신건강 지원 확대 추진, 임신·출산 진료비 보장성 확대 검토

-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전국 확대, 영유아~성인까지 검진기록을 연계하여 생애주기 통합적 건강 관리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책임 강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업 활성화 등 통해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2022년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1. 12. 30.)

###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

#### ㉠ 예방·발견-보호-사례관리 등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내 실화

○ (위기아동 예방·조기발견)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개입체계 본격 가동\*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고도화('22)하고, 최근 확충한 전담인력(+524명)·사례결정위원회(모든 시군구 229개 설치) 적극 활용

- 보육·교육기관 중심으로 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현장관찰이 강화되도록 지자체-교육기관-경찰 등 연계 강화(월 1회 회의 원칙)

○ (가정보호 활성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가정형보호 우선조치 결정 및 가정위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친가정과 유사한 지원 확대

\* 위탁가정 풀(pool)관리제·전문가정위탁사업 도입('22-), 가정보호 이행률 정례 점검('22-)

○ (사례관리 강화-인프라 확충) 학대 피해가정에 심리 케어 등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운영(1,000가정), 아동 보호 시설·인력\* 지속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81→95개), 피해아동쉼터(105→141개), 위기아동 가정보호(200가정) 아동보호전담요원(524→715명)·전담공무원(664→765명), 아동그룹홈 중사자(시설당 3~4명)

2022년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1. 12. 30.)

②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구축

- 예비 양부모 결정과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 확대
  - \* 외부전문가 포함 결연위원회 구성 의무화, 양부모 교육 강화, 지도점검 의무화 등
  - \*\* 입양축하금(1회, 200만원) 도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월 15→20만원)

출처: 2022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참고 자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안 등: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2022. 11.

[신현영 의원안: 영유아의 정의 연령 조정](#) 2022. 11.

[조명희 의원안: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으로 추가](#) 2022.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안 등: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강화 등](#) 2021. 2.

[최연숙 의원안 등: 보호종료아동 취업지원 강화 등](#) 2021. 11.

[강선우 의원안 등: 자립지원 대상자 명시 등](#) 2022. 11.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보호종료\(예정\)아동 심리정서 실태조사](#) 아동권리보장원 연구보고서 2021. 8. 1.

본 연구는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와 연계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심리정서적 자립(준비) 현황과 심리정서 수준 실태, 심리정서 영역의 정책 지원 욕구를 파악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심리정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진단 및 분석하여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NARS 입법·정책」 2020. 8. 13.

이에 보고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세부적인 업무수행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이 포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0. 5. 4.

- 조손가정은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님
  -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음
- 조손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연령 조부모와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정보 습득 및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은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손가정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음
-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조손가정 등에 네비게이터(안내자)를 지원하여 조손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연계하며 향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음

## 다.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 개요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 21일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17일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이 각각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완성하는 내용의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본회의에서는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등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u>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하에서 보호·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상 및 역할에 부합하는 만큼의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므로,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와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3-07-18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 과제목표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 주요 내용

#####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체계 정비)
  - \* 재화 개념 '문화재' ⇒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 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육성,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미래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기반 강화

##### (청와대 개방 및 역사 보존·활용)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활용

- 청와대 전면 개방, 문화재 기초조사 및 정비 등

#####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로 규제 일원화('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및 미래형 전승체계 구축

-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 종목 맞춤형 지원 등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 확대

###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2023. 1.)

#### 전략과제 1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 ◆ [현황]

- '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는 변화된 문화재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 유형유산 이외 무형유산, 자연유산, 근현대유산, 디지털유산 등 보호대상과 시대범위 확장 중

< 현행 >	< 개편안 >
문화재	국가유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 국민(76.5%), 전문가(91.8%) 문화재 개선 필요, 국민(87.2%) 통칭으로 '국가유산'이 적절

- 문화재 보호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로 가치있는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전승 위기
- 비지정 역사문화자원 조사결과(21년) 1만 2천 건 중 2천여 건(16.8%)이 훼손·멸실
- 지자체 등 현장 전문성 미흡, 안전불감증·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문화유산 훼손 및 현장인력 안전사고 발생
- 지자체 정비공사 중 '갈해 구산동 지석묘' 훼손, 문화재수리업체의 '서울 문묘 운영나무' 훼손, 민간 발굴조사기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굴조사 현장 인명사고 발생 등
- 산업화·도시화로 무형유산의 지역적·인적 전승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수요부족 등으로 전승취약종목의 단절 위기 가속화
- 바디장 전통장(수요 부족), 갯일항간장(원재료 수급 어려움) 등 35개 종목

##### ◆ [추진방향]

- Ⅰ (국가유산 체제 전환) 비체계적인 분류체계 개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 변경 등 '국가유산' 체제로 정책 패러다임 확장 (국정과제 62)
  -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가유산 법체계 추진
- Ⅱ (가치발굴·온전한 보존) 가치있는 미래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체계적 보수·복원 및 제도 정비 추진
- Ⅲ (현장중심 관리 강화) 신속·정확한 재난대응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문화유산 안전관리망 구축, 지역·현장 기반 보존관리 전문역량 강화
- Ⅳ (무형유산 전승 안정화) 전승취약종목 맞춤형 지원 확대, 전승공동체 종목 지정·육성, 젊은 전승자 양성 등 안정적 전승기반 조성 (국정과제 62)

출처: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문화재청 누리집

## 참고 자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3.

이병훈 의원안: 보유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전승자 등의 재인정 근거 마련

[국가유산기본법안 등 11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 12.

배현진 의원안: 제안경위 등

[문화·자연·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보도자료

[UNESCO 문화유산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적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20-17-③ 2020. 9. 30.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가입한 문화유산 관련 3개 협약을 대상으로 해당 규범이 국내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또한 협약의 이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문화재청 국가유산 정책포럼 2023. 6. 30.

주제발표1: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와 발전방향(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2: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정책토론회 2022. 8. 11.

발제1: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기본법 제정 및 법체계 정비(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발제2: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조일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

##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